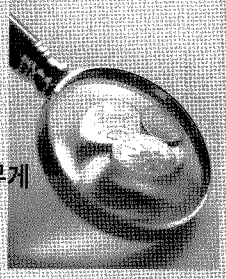
● 산업동향

1. 국내 최대 킨텍스, 제 2 전시장 개장
2. 기업 10곳 중 3곳 이자도 못갚아
3. "하도급계약서 지연교부도 법위반"
4. 中企중앙회 조사, 中企 73%"외국인력 부족" 호소
5. 中企업계, 2011년 세법개정안 환영
6. 中企 10곳중 6곳 동반성장 체감 못해
7. 정전피해 8천 962건 · 610억원
8. 상용근로자 32.3% 퇴직연금에 가입
9. 인천中企 47% "의무검사로 경영 부담"
10 "中企업종 손떼고 성과 공유제 검토하겠다"
11. 한은, 기준금리 3.25%로 동결
12. 국내기업 절반, 환율급등으로 피해
13."4분기 기업 자금사정 악화 우려"
14. 법인 · 소득세 추가감세 중단으로 3조 세수 확보…재정건전성에 무게
15.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편법적인 부의 되물림 차단
16."서민 · 중소기업 · 청년취업자 등 취약계층 우선 배려"
17. MF, 올해 한국 성장률 4.5%서 4.0%로 하향 조정
18. 재정부, 2010년 경제백서 발간
19."내년도 우리나라 수출 · 수입 증가율 둔화될 듯"
20. 한-일 정상, 한일 통화스왑 700억불로 확대 합의



1. 국내 최대 킨텍스, 제 2 전시장 개장

국내 최대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KINTEX) 제 2 전시장'이 지난달 28일 개장했다.

킨텍스 제 2 전시장은 3,591억원이 투입돼 2009년 3월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6개월 만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준공됐으며, 전시면적 5만 4천㎡(부지면적 20만 566㎡)로, 제 1 전시장을 합치면 10만 8천㎡로 늘어 명실상부 국제전시장으로서 하드웨어를 갖추게 된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중국 광저우(33만 8천㎡), 태국 임팩트(13만 7천㎡), 중국 상하이(12만 6천㎡), 중국 선전(12만㎡)에 이은 5위권에 해당한다.

제 2 전시장은 제 1 전시장에 비해 여러 면에서 개선됐다.

최첨단, 친환경으로 지어져 자동차 유도시스템, 냉·난방 온도 자동조절 시스템, 지열·햇빛·빗물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시스템이 구축됐다. 건물 외관은 단조로운 직사각형 형태의 제 1 전시장과 달리 비상하는 '나비' 모양으로 입체감을 살렸으며, 건물은 규모 6.5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는 등 안전성을 높였다.

전시홀은 모두 5개 홀로, 다목적홀인 6홀은 전시, 공연, 회의가 동시에 가능하고 다목적 홀을 제외한 7~10홀은 모두 2층에서 전시장을 내려다보고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업체는 1층에서 전시물품을 하역, 곧바로 출입한다. 입구에서 세로로 길게 된 제 1 전시장 전시홀과 달리 제 2 전시장은 가로 규격을 길게 해 전시장 활용도와 관람객의 동선을 짧게 한 것도 특징이다.

제 2 전시장에는 지상 15층(연면적 1만 8천㎡)짜리 별도의 사무동도 갖춰져 전시행사에 필요한 100여 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다. 사무동은 전시 기획부터 장치·설비까지 전시 클러스트를 형성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참가 업체들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기업 10곳 중 3곳 이자도 못갚아

경기침체로 올해 국내 상장기업 10곳 가운데 3곳은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계기업이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해 더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재무부실기업을 말한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천 491개 조사업체 가운데 올해 2분기 이자보상 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30.2%로 전년 같은 기간(26.1%)보다 4.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으로, 이 비율이 100%에 못 미치면 돈을 벌어 이자도 못 갚는 셈이다. 이 가운데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 이자를 한 푼도 갚을 수 없는 이자보상비율 0% 미만인 기업은 지난해 2분기(19.2%)보다 2.3%포인트 늘어난 21.5%에 달했다.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2009년 평균 32.3%에서 2010년 27.3%로 줄었으나 올해 들어 다시 30% 안팎으로 늘어났으며, 신용보증기금이 거래하는 기업 가운데 한계기업의 보증 규모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신보는 ▲최종 2개년 연속 총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 ▲최종 2개년 연속 자기자본 전액 잠식기업 ▲최종 3개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 중 하나에 속하는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보고 있다. 신보의 한계기업 보증 규모(특별보증 제외)는 2007년 8천 535억원, 2008년 1조 64억원, 2009년 1조 1천 927억원, 2010년 1조 2천 202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들어서는 지난달까지 1조 2천 11억원을 보증했다. 다만 전체 보증잔액 대비 한계기업 보증 비중은 2007년 3.0%, 2008년 3.4%, 2009년 3.1%, 2010년 3.2%, 2011년 8월 현재 3.1%로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신보는 이들 기업 가운데 지난 8월 기준 부실징후가 나타난 289개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신용관리) 프로그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3. "하도급 계약서 지연교부도 법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뿐만 아니라 뒤늦게 교부하는 행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위탁내용, 위탁금액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하도급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서면계약을 지연발급하고 대금을 뒤늦게 지급한 롯데건설㈜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LS전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롯데건설은 지난 2009년 1월 현대제철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기계공사의 `가설 비계(고공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발판구조물) 추가공사를 시작한 수급사업자에게 작업 개시 6개월이 지난 뒤 서면계약서를 발급하고 공사를 마친 뒤 1년

6개월이 지난 8월 19일에야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36억여원을 지급했다.

LS전선은 전선포장재를 제조 위탁한 수급사업자에게 2009년 발주물량이 전년 대비 17% 증가할 것이라며 납품가격을 5% 인하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17% 감소한 물량만을 발주해 수급사업자에게 3천여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공정위는 롯데건설과 LS전선이 모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해 경고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에 직권조사해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10여건의 사건을 추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 中企중앙회 조사, 中企 73% "외국인력 부족" 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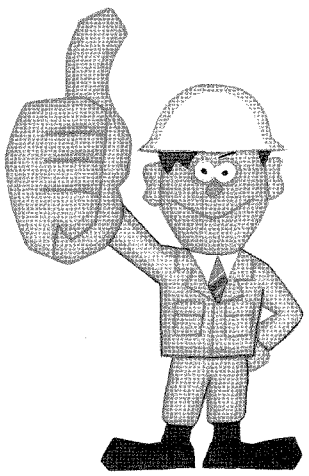
중소기업계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국내 중소제조업체 589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애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73%가 '현행 외국인근로자 배정인력 규모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총 4만명으로 지난달까지 대부분 소진되고 10월 신청분 2천명만 남아있는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인력수요를 감안하면 현재 외국인력이 3만 5천 여명 정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인력수요에 맞게 외국인 도입쿼터를 시급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응답업체의 88%가 '내국인 근로자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답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주된 이유가 저임금(3.7%) 등이 아닌 내국인의 취업기피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외국인력 신청 절차에서 개선돼야 할 점으로는 35.8%가 '내국 인력 구인'을 위해 2주간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답했으며 33.3%는 '신고절차 일원화', 22.3%는 '입국 소요기간 단축'이라고 답해 신속한 인력 수급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외국인력 활용 시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사업장변경을 위한 태업 또는 꾀병'(52.8%), '입국 후 1개월 내에 사업장 변경 요구'(32.4%), '외국인들의 단체 행동'(30.9%) 등을 꼽았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과 관련, 최소한 입국후 1년 이내에는 변경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36.3%)과 근로자가 임의로 요구하는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32.1%)이 많아 외국인 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업장 변경 요구로 업체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中企업계, 2011년 세법 개정안 환영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공생발전에 대한 정부 의지가 재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체적으로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집중한 개정안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에게는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중앙회는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하고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한 점 등은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경영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에 의한 이익에 증여세를 매기기로 한 것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한 점에서도 정부의 공생발전 의지가 잘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가업승계 관련 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환영 의사를 드러냈다. 중앙회는 "가업상속 공제율이 40%에서 100%로, 공제한도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가업승계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에서도 명문 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0년간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이 신설된 것과 관련해서는 "자칫 우량 가업승계 기업 중에서도 혜택에서 제외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6. 中企 10곳중 6곳 "동반성장 체감 못해"

정부가 동반성장 대책을 추진한지 1년이 됐지만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정부의 동반성장 대책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30.8%는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의 동반성장 인식이 개선됐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0.4%에 달해 절반 이상이 동반성장 인식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악화했다는 응답도 8.8%나 됐다.

정부의 동반성장 추진 노력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답변이 44.2%였고, '보통이다'(43.0%), '잘하고 있다'(12.8%) 등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정부의

동반성장 대책에 대한 기업 현장의 체감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60.8%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31.4%), '체감한다'(7.8%) 등 순이었다.

동반성장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30.9%(정부), 19.4%(대기업)에 그쳐 정부나 대기업의 실천의지에 대해서도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납품단가 현실화 문제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11.8%에 불과한 반면 악화됐다는 응답이 18.4%였고 변화가 없다는 답변도 69.8%였다.

불공정거래 관행도 17.8%만 좋아졌다고 했고, 나머지는 그저 그렇거나 나빠졌다고 답했다.

현재 추진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자생력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9.8%, '기여하지 못한다'는 기업이 40.2%로 긍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적합업종 선정후 대기업의 제도이행은 '단기간 이행하다 말 것'(75.0%), '이행하지 않을 것'(12.0%)으로 조사돼 부정적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동반성장 문화에 대해선 전체의 65.8%가 '어느 정도 정착됐으나 다소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5년 이상 걸릴 것이란 예상이 78.6%로 다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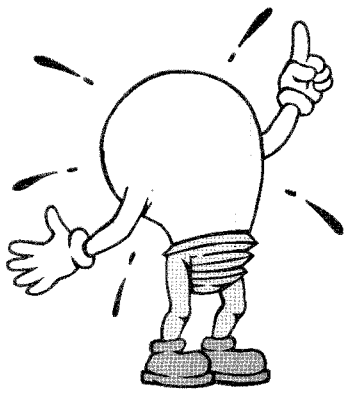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부문으로는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53.0%),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26.2%), '대기업 이행실적 평가'(12.2%) 등이 꼽혔고 대기업이 이행할 분야로는 '납품단가 현실화'(78.0%), '현금결제 확대'(16.4%) 등이 거론됐다.

7. 정전피해 8천 962건 · 610억원

지난달 15일 발생한 순환정전과 관련해 전국에서 약 9천 건의 피해 보상신청이 접수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일 정전 피해보상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신고건수는 8천 962건, 신고금액은 61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50만 원 이하 소액 신청이 전체 건수의 51%(금액 5억 8천만원)를 차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충북 청주의 태양광 발전설비 부품업체인 렉서의 경우 정전사태에 따른 기계장치 손상 등으로 45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정전 피해보상 신청 접수는 지난달 20일부터 2주간 전국 한전 지점, 소상공인진흥원,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295개소에 설치된 정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이뤄졌다.

지경부는 지난달 30일 전기위원회 산하에 구성한 정전피해보상전문위원회(위원장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대표)의 검토를 거쳐 유형별 보상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조속히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8. 상용근로자 32.3% 퇴직연금에 가입

상용 근로자 3명 중 1명꼴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전체 상용근로자 912만 5천 795명의 32.3%인 294만 8천 32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퇴직연금 가입 현황은 확정급여(DB)형이 205만 9천 643명으로 69.9%를 차지했고 확정기여(DC)형이 81만 3천 429명으로 27.6%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나머지 7만 4천 960명(2.5%)은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했다.

DB형은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며, DC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내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한다. IRA는 정년 전 일시퇴직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맡겨 근로자가 관리하는 제도다.

사업장 규모별 도입률은 500인 이상 68.8%, 300~499인 46.0%, 100~299인 37.3%, 30~99인 29.1%, 10~29인 19.6%, 10인 미만 5.1%로 나타나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퇴직연금 도입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9. 인천中企 47% "의무검사로 경영 부담"

인천지역의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이 소방안전, 전기안전 등 형식적인 각종 의무검사로 인해 경영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지역 중소기업 118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기업의 의무검사 관련 애로실태 기업인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6.5%가 환경, 소방, 전기안전 등 각종 의무검사로 인해 경영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업체의 3.6%는 연간 20회 이상 각종 의무검사를 받고 있으며 19.7%가 11~20회, 6~10회 17.8%, 58.9%는 1~5회씩 의무검사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의무검사에 드는 평균비용은 100만~299만원(40.4%)이 대부분이고 연간 500만원과 1천만원이상인 업체의 비중도 26%나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의무검사가 부담스러운 이유로 '비싼 검사 수수료' (34.8%)와 '검사준비에 따른 업무공백' (30.4%), '검사에 따른 공장설비 가동 중단' (15.2%)과 '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납부' (15.2%)를 각각 꼽았다.

또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검사' (41.0%)와 '검사주기와 시간의 과도함' (24.5%), '유사한 검사의 중복' (24.1%) 등을 현행 의무검사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의무검사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문'으로 '환경' (33%)과 '소방' (29.5%)을 꼽았으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와 시간의 조정' (33%)을 최우선으로 요구했고 이어 '가능한 경우 자체 검사 후 통보로 대체' (28.8%), '유사한 검사를 통합해 중복검사 배재' (28.4%)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현행 의무검사 자체를 기업자율에 맡겨줄 것을 바라고 있다"며 "의무검사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적인 대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 "中企업종 손떼고 성과공유제 검토하겠다"

한화그룹이 공생 발전을 위한 `7대 종합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실행하기로 했다. 한화는 중소기업형 사업 철수와 협력업체 지원, 친환경 사회공헌사업 확대, 사회복지재단 설립, 성과공유제 검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생 발전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달 말 한화S&C의 소모성 자재구매 대행(MRO)사업을 타업체로 이관한 한화는 계열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중소기업형 사업을 선별하고 추가로 철수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동반성장펀드를 1천억원으로 확대해 운영하는 한편 연말까지 한화기술금융을 통해 2천억원 규모의 동반성장섹터 펀드를 조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화는 향후 10년간 150억원을 들여 전국 500여개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친환경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결성하고 내년중 납입 자본금 100억원 규모의 재단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재단이 설립되면 추가로 400억원을 투입한다.

한화는 주요 계열사의 협력업체에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자금을 지원한 뒤 사전 약

정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고 밝혔다.

11. 한은, 기준금리 3.25%로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개월 연속 동결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국내외 여러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동결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제경제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금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으며, 동결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으며, 기준금리 인하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김 총재는 말했다.

김 총재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후 미국, 유럽 등의 금융시장 불안을 면밀히 살펴봤으나, 최근에는 금융불안이 실물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이 높아져 가는 한 금리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다"며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것이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연합(EU)과 FTA를 한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라며 "득과 실을 보는 계층간 조화 등의 문제에서 정치적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때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12. 국내기업 절반, 환율금등으로 피해

최근 원화가치 급락으로 국내기업 2곳 가운데 1곳은 경영상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 297곳을 조사한 결과, '환율상승으로 손해를 입었다' 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48.5%(큰 피해 7.4%, 다소 피해 41.1%)였다고 최근 밝혔다.

'환율상승이 도움을 줬다'는 응답은 32.6%로 집계됐다.

'피해가 있다'는 응답비율은 내수기업(59.2%)이 수출기업(37.2%)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환율상승이 수출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하지만 적지 않은 수출기업(37.2%)이 피해를 본 것은 원 · 달러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원자재 · 중간재의 수입가격 역시 덩달아 올라 기업의 채산성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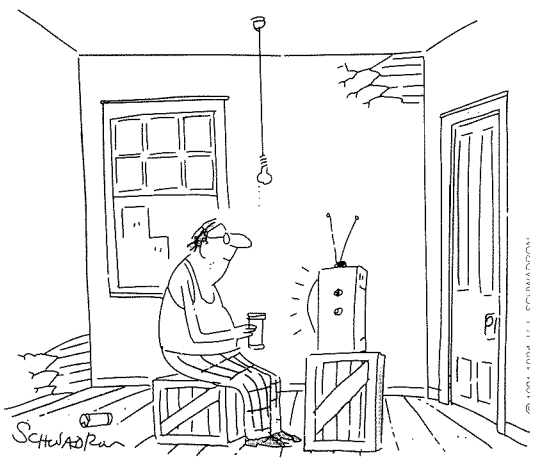
실제로 환율상승에 따른 피해유형(복수응답)으로 '수입단가 상승으로 가격경쟁력 약화'(68.2%)가 가장 많이 꼽혔고, 원화 환산 수입액 증가에 따른 환차손 발생(57.4%), 외화 대출자금 이자 부담증가(3.7%) 등이 뒤를 이었다.

수입단가 상승분의 상품가격 반영 여부와 관련한 물음에는 '아예 반영할 수 없다' 와 '10% 미만 반영' 이 각각 44.4%, 42.8%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반영비율이 '30%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5.1%에 달했지만 중소기업은 4.4%에 그쳐 환율상승에 따른 피해가 중소기업에서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율 불안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답은 절반 이상(56.9%)이었고, 내년 상반기까지 갈 것이라는 응답은 31.6%였다.

환율상승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복수응답)으로는 원가절감 · 생산성 향상(40.3%), 환헷지 등 재무적 대응(27.2%), 수입선 다변화(17.0%), 결제통화 다양화(10.9%) 등이 꼽혔다.

손영기 대한상의 거시경제팀장은 "최근 환율급등으로 수입단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많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통한 환율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3. "4분기 기업 자금사정 악화 우려"

상의 전망, 자금지수 92…대기업보다 中企 더 어려울 듯올해 4분기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3분기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더 나빠져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기업 500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4분기 기업자금 사정지수(FBSI)가 9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의가 FBSI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9년 3분기 이래 최저치다.

FBSI는 기업들의 자금흐름을 수치화(0~200)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전 분기보다 해당 분기의 자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자금 사정 악화 이유로 매출감소(57.1%)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고, 제조원가 상승(29.2%), 수익성 감소(13.7%)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99)보다는 중소기업(90)이, 업태별로는 제조업(94) 보다는 비제조업(89)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자금조달 시장 상황에서도 4분기 전망치가 92로 전분기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조달 항목별로는 기업어음(95), 주식(95), 회사채(94), 은행(93), 제2금융권(93) 모두 기준치인 10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과 관련한 애로사항으로는 금리부담(81.2%)을 가장 많이 꼽았으

며 다음으로 까다로운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15.2%), 매출채권 회수부진(2.9%), 외환변동성 확대(0.7%)를 꼽았다.

기업들의 전반적인 자금수요 상황은 101로 기준치를 약간 웃돌았으며, 항목별로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이 각각 101, 부채상환자금 100, 재무상황 %, 수익성 % 등으로 집계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수출이 둔화세를 보이고 소비와 투자 감소로 내수마저 부진해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다"며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불안, 수출 감소 우려 등 불안요인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쟁력있는 중소기업들이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4. 법인 · 소득세 추가감세 중단으로 3조 세수 확보…재정건전성에 무게

정부가 7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결국 재정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감세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던 정부는 이날 오전 고위당정협의 끝에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감세를 제외하곤, 법인 ·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했다.

글로벌 재정위기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감세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35%로 유지하고, 법인세는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을 2억~500억원 이하 및 500억원 초과 구간으로 세분한 뒤, 중소 · 중견기업들이 주로 적용받게 될 2억~500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20%로 인하했다. 반면 500억원 초과 구간은 현행 22%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가로 거둬들이는 세수는 3조원 가량이다.

다만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용창출공제)로 전면 개편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신설하는 등의 세법개정 내용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임투공제는 연간 공제 규모가 연간 2조 1,000억원이나 돼 재계가 줄곧 폐지 반대를 주장해 왔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폐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지만 결국 '임투공제(4~5%)+고용창출공제(1%)'라는 절충안으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

정부는 올해도 임투공제 폐지 대신 완전한 고용창출공제로의 전환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투자만 하면 무조건 세금을 감면해주기 보단 기업투자에 반드시 고용 유지 또는 증가가 수반돼야만 세금 감면을 해주겠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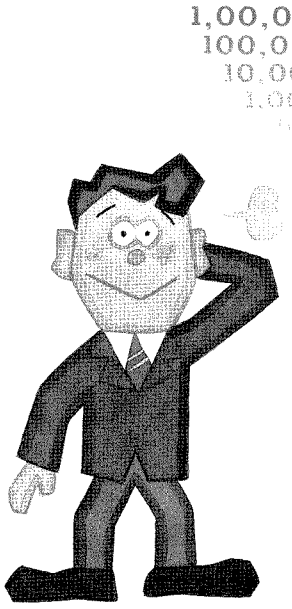
투자금액의 5%(수도권 내 대기업) 또는 6%(수도권 밖 대기업 및 중소기업)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것은 지금과 같지만, 일자리 증가가 없으면 최대 공제액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본공제 4%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고용감소가 있는 투자라면 아예 기본공제조차 받지 못한

다. 재계에 '고용있는 투자'를 재계에 요구한 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을 늘리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지원을 더욱 확대했다. 회사측이 부담해야 하는 신규 인력의 사회보험료를 2년간 감면해주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도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1인당 수백만원의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됐고, 신입직원도 3년간 세금 감면액만큼 인금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제조업, 연개발업 등 39개 업종에 대해 5~30% 세액감면)를 3년간 연장했으며, 원활한 가업상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업상속 공제율(40%→100%)이나 공제한도(최대 100억→최대 500억원)도 확대했다.



15.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편법적인 부의 되물림 차단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제일 고심한 부분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다.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변칙적인 상속 · 증여가 발생한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나왔는데, 이를 어떻게 과세할지가 고민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주가상승 차익보다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 방법을 택했다. 일감 몰아주기가 계속되는데도 외부환경에 의한 주가 폭락 등이 있을 수 있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3%-30% 기준을 정하는 등 상당히 신중을 기했다. 특수관계법인(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넘길 경우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수혜법인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여러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감안, 합산시 30%를 넘으면 과세 대상으로 봤으며, 우회지분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간접출자비율만큼 증여세 계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해 제외하기로 했으며, 소급적용 없이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세법 통과 전까지 여러 논의를 거치겠지만,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편법적인 부의 되물림을 차단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16."서민 · 중소기업 · 청년취업자 등 취약계층 우선 배려"

[2011 세법개정안] Q&A로 풀어본 개정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일자리고 곧, 복지'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고용 친화적 세제 지원을 골자로 한 '201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주제별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면제해준다는데, 어떠한 내용인가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후 근로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해주며, 첫 취업 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는 청년취업자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취업자란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만 15~29세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최고 35세까지 대상연령을 확대했습니다.

그렇다면 군복무기간은 어떻게 가산하나요?

군복무기간 가산은 취업시 소득세 면제대상 연령 한도를 만 29세+취업자 개인별 군복무기간으로, 최고 35세까지 대상연령을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만 29세+군 복무기간 2년=만 31세, 만 29세+군 복무기간 5년=만 34세, 만 29세+군 복무기간 6년 이상=만 35세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 후 중간에 이직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은 자가 2013년 말까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 면제를 적용받은 때로부터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을 이직하는 경우와 A중소기업에서 B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2012년 4월 15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3년 4월 15일 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2013년 4월분 급여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2012년 4월 1일 A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3년 9월 1일 B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2012년 4월~2015년 3월분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근로장려금(EITC)의 요건이 완화되고 지급금액은 확대되었다고 하던데, 개정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과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는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소득 서민층의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다음 네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가족요건)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

② (총소득요건)

가구(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다음의 총소득기준 미만일 것

③ (주택보유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일 직전 연도 6월 1일 현재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인 1주택을 소유할 것

④ (재산 요건)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서 추가되는 무자녀 가구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자녀가구란 신청일의 직전연도 12월 31일(과세연도 종료일)에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자녀가 없거나 부양자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녀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양자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세요.

- 어머니와 6세 자녀로 구성된 2인 가구 -〉 1인 자녀 가구로 판단
- 부모와 23세, 17세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 -〉 1인 자녀 가구로 판단
- 어머니와 17세, 14세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 -〉 2인 자녀 가구로 판단
- 부부만 있는 2인 가구 -〉 무자녀가구로 판단
- 부부와 25세, 23세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 -〉 무자녀 가구로 판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총급여가 4,800만원인 홍길동씨가 신용카드 1,600만원 (전통시장사용분 제외), 체크카드 400만원(전통시장사용분 제외),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으로 전통시장에서 400만원 사용하였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즉,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 2,400만원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사용액 1,200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400만원×20%+체크카드 400만원×30%+전통시장 400만원×30%=3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 300만원+추가공제금액 20만원**

** 추가공제금액={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20만원과 전통시장사용금액(400만원)×30%=120만원 중 적은금액}, 100만원 한도

전 ·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세요.

기존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세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었습니다.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기존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연말정산신고 총 근로자 1,425만명 가운데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86%(약 1,230만명)에 달하므로 대다수의 근로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용시기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거주용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세금부담이 있지 않나요?

그동안 거주용 자가주택 1채를 보유한 자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어 주택임대사업에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이를 해소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고자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채만 보유하면 해당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여기서 거주용 자가주택 요건은 양도 당시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채의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자가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후에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해당 임대주택도 거주용 자가주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직전에 비과세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됩니다. 임대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거주용 주택으로 전환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 시점에서 2채 이상의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중복하여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전에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합니다.

2주택자가 1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거주용 자가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고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거주요건 없음)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습니다.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분 조정 차원에서 지난 1989년 도입됐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에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높여 주택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주택가격 급등 가능성이 낮아 주택투기수요 억제의 필요성은 적은 반면 주택거래 위축 등의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연 3%)까지 허용하려고 합니다.

17. IMF, 올해 한국 성장률 4.5%서 4.0%로 하향 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 예상치는 4.4%로 제시해 종전의 4.2%보다 0.2%포인트 올려 잡았다.

IMF는 20일 '2011 상반기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자료를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제시해 지난 6월 발표한 전망치 4.5%에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올해 4.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종전의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올렸다.

IMF는 "선진국은 민간의 수요회복세가 지연되는 가운데 국가채무와 금융시장 불안 등이 당초 예상보다 심화되고 있고, 신흥국 경제는 확장세를 지속하고는 있으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분석에 따라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 4.0%로 전망해 6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춰 잡았다. 아울러 내년은 0.5%포인트 낮춘 4.0%로 내다봤다.

IMF는 선진국은 미미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1.6% 성장하고 내년에도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6월 전망치에 비해 올해는 0.6%포인트, 내년은 0.7%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또 신흥국은 미국과 유럽 등의 여건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성장세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흥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0.2%포인트 낮아진 6.4%, 내년은 0.3%포인트 하락한 6.1%로 전망했다.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을 살펴보면 미국은 올해 1.5% 및 내년 1.8%로 종전보다 각각 1.0%포인트 및 0.9%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유로지역은 올해 1.6%에서 내년은 1.1%로, 중국은 올해 9.5%에서 내년은 9.0%로 각각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유럽의 재정위기 지속 및 확산 가능성과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 재정건전화 관련 정치적 논

란 등에 따라 경기둔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6월 전망과 대비해 경기하방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IMF는 특히 "금융시장과 자본이동의 변동성 확대와 실물경제 침체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흥국은 과열우려 등의 위험이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선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IMF는 정책방향과 관련해 "선진국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수요 리밸런싱이 필요하다"며 "중기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성장과 고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흥국에 대해선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재정긴축 및 환율절상 등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수가 과도한 국가(남미 등)는 재정긴축을 통해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내수가 부족한 국가(아시아 등)는 구조개혁과 환율절상을 통해 내수를 확충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2011년 경제전망 수정치에서 "아시아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선진국 경제의 더딘 회복으로 지난 전망치보다 하락하겠으나, 국내소비와 역내무역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각각 7.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아시아 지역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국제원자재가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 5.8%로 지난 전망치보다는 상승하겠으나, 내년에는 4.6%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IMF팀
(02-2150-4841)

18. 재정부, 2010년 경제백서 발간

기획재정부는 23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서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등의 내용을 담은 '2010 경제백서'를 발간했다. 2010 경제백서는 지난해 국내외 경제동향과 정부의 거시정책 운용, 일자리 창출, 경제시스템 선진화, 지속가능한 성장 대비, 국제공조 등을 담고 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 경협을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의와 성과 및 향후 전망 등도 수록했다.

박재완 장관은 발간사에서 "2010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했다"며 "불과 반세기 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고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이런 성공의 역사가 미래의 성공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재정위기와 경기 둔화 등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적으로도 경제성장력이 약화된 가운데 부문 간 격차가 여전하고 고령화로 인해 복지 · 교육 · 주택수요 등에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며 "우리는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복지를 꾸준히 넓히는 동시에 재정건전성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02-2150-2737~8)
판매. 정부간행물 판매센터(02-734-6818),
한국경제서적(02-730-4976)

19. "내년도 우리나라 수출 · 수입 증가율 둔화될 듯"

"UN ESCAP, '아 · 태 무역투자보고서' 발간"

내년도 우리나라의 수출 및 수입 증가율이 2%포인트 내외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무역과 투자 현황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은 강한 펀더멘털(기초여건)을 바탕으로 장기간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엔 아시아 ·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 아 · 태 무역투자보고서' 발간 행사를 가졌다.

보고서는 한국의 무역 · 투자에 대해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14.5%에서 올해 11%, 내년 9% 등으로 내려가고 수입 증가율도 지난해 17%에서 올해 10.7%, 내년 8.1% 등으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단기적 물가상승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자본 유입과 유가 ·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보고서는 아 · 태 지역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해선 "아시아 · 태평양 국가들은 중국과 인도 등 거대 경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기후 대응 상품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기후 대응 상품과 기술은 국제적으로 많은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서 각광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기후 대응 상품에 대한 관세 · 비관세 장벽 완화와 기술표준 제정과 같은 정책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관련 중소기업

의 역량을 강화해 저탄소 상품의 글로벌 생산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과 인도의 도시화는 원자재 및 중간재뿐만 아니라 자본재와 최종 소비재 수출을 위한 풍부한 시장을 제공한다"며 "아 · 태 국가들은 중국과 인도 등 거대시장을 보유한 역내 국가와도 무역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생산 · 수출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아 · 태 지역에 미개척지로 남아있는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필수적"이라며 "통신, 교통, 에너지, 상하수도, 금융 등 인프라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역내 무역원활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중소기업의 역내 또는 글로벌 생산망 참여 확대 △다자 및 지역무역협정간 연계 강화 등도 아 · 태 지역 무역 · 투자 확대를 위한 과제로 꼽았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02-2150-7675)

20. 한-일 정상, 한일 통화스왑 700억불로 확대 합의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일본 총리는 19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간 통화스왑을 700억불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일 정상은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양국 간 금융 · 통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현재 130억불 규모인 통화스왑을 700억불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또한 통화스왑이 양국의 통화인 원-엔 및 달러화로 가능하도록 하여 외화유동성 공급효과를 극대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환보유액과 중국과의 통화스왑 외에 추가로 일본과 700억불 규모의 외화 유동성 공급 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선제적 금융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고 국가 신용등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토대를 강화하게 됐다.

또한 외화유동성 우려를 완화시켜 차입금리 하락 등을 통해 국내 은행과 기업들의 경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